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와 한계

황진태*

본 논문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으며, 국내 사회과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이론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며, 인간중심주의라는 인식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밥 제습의 정치생태학적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국가-자연 관계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검토하며, 이를 기존 전략관계적 구성요소들과 접목하는 이론적 과제를 논한다. 본 논문은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향후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용어: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정치생태학, 밥 제습, 인간중심주의, 인간 너머의 접근.

* 동국대학교(서울) 북한학과 조교수, dchjt@dongguk.edu

1. 서론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는 탁월한 이론 중 하나로, 국내 사회과학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는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지만,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고안한 밥 제습(Bob Jessop)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5년 동안(2006~2021년으로 추정 - 인용자 주) 나는 비판적 정치경제학에 대한 나의 기존 관심을 정치생태학 비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Jessop and Morgan, 2022: 103)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을 통해, 제습이 비교적 최근에서야 정치생태학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국가연구에서도 정치생태학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와 한계를 탐색한다.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제습이 이 이론의 창시자이자 중심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치생태학적 성찰에서는 그의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그의 다소 ‘모호한’ 국가와 자연 관계가 보다 정교화되었고,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의 유효성이 검증됨과 동시에 쇄신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한 흐름으로 주목된다.

이처럼 제습의 정치생태학적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려면 그의 저작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생태학, 환경사회학 연구에서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일부를 가져다 적용한 시도들은 많지만, 정치생태학의 시각에서 제습 저작의 전반적 검토는 거의 부재했다.¹⁾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의 시각에서 그의 저작들을 본격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밥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를 이론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일부 신유물론에 경도된 연구자들이 갖는 회의에 응답하고자 하는 의도도 이 논문에 담겨 있다.

인간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 재해·재난과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동시에 비인

1) 콰스텔(Quastel, 2016)은 제습의 전략관계적 접근을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드문 연구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나 비인간 행위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는 확장하지 못했다.

간(nonhuman)의 행위성이 한층 더 뚜렷해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오늘날,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이 국가연구에도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식이 지금까지 세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온 인간의 행위성과 인간 중심적 구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으나, 지구를 식히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그리고 여전히 국제 질서의 가장 강력한 기본 단위로 기능하는 국가, 나아가 국가를 움직이는 자본축적의 논리와 인간의 필요를 우선하는 인간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반면, 비인간의 행위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공감하는 사회세력의 영향력은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할 때, 탈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일부 신유물론 연구들이 비인간의 행위성에 주목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행위성과 구조적 역학을 간과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에 대해 필자는 비판적 시선을 갖게 된다. 즉, “인간 중심 이론 자체를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에 본 논문은 의문을 표한다[필자와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램케(2024: 17)를 참조하라].

필자는 신유물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3절에서 제안할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이론과의 단절이 아니라, 그 이론들을 탈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수정·확장하는 작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 중심적 국가를 설명하는 데 탁월했던 이론들을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식으로 폐기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여전히 작동하는 현실에 기반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은 학술적 차원을 넘어, 인간중심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다수의 인간들이 비인간에 대한 공감과 책임의 윤리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연구 지형 내에서 국가와 자연의 위치를 조망한다. 기존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는 생태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습의 전략관계적 접근이 적용된 국

가와 사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이 두 흐름 사이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었다. 따라서 이 이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와 자연, 국가와 사회 연구들 간의 이론적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절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제습이 정치생태학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인식을 살핀다. 그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로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본 연구는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자체에 인간 중심적·자본 중심적 한계가 내재해 있음을 지적한다. 이어, 제습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확장한 후속 연구로서 ‘국가-자연(state-nature)’(Whitehead et al., 2007) 연구를 주목한다. 이 개념은 제습의 추상적인 이론을 보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며, 다양한 사례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4절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한계를 다룬다. 이 장의 핵심 문제의식은 인간중심주의에 있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새로운 국면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인식론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안적으로 제시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에 주목한다. 이 신생 개념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주요 구성요소들(예컨대 수출주의나 비판적 실재론)과의 이론적 조정 및 접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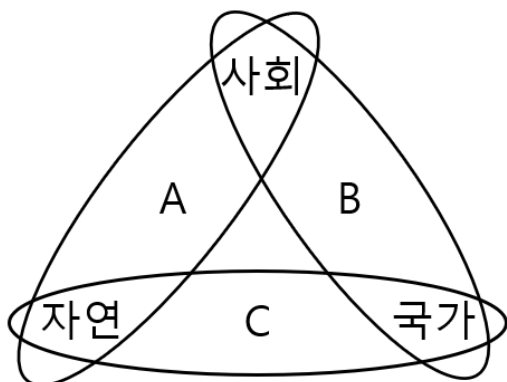
5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후 글을 마무리한다.

2. 마르크스주의 연구 지형에서 국가와 자연의 위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절에서는 국내 마르크스주의 연구 지형에서 국가와 자연의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조망한다.²⁾ 논의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하여 <그림 1>을 중심으로 논한다.

-
- 2) 2절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지 않다. 생태주의, 행위자-연결망 이론, 녹색국가론 등 다양한 이론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정리한 논의는 황진태·박배균(2013)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그림 1>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 사회-자연-국가의 관계



출처: 필자 작성.

<그림 1>의 타원 A는 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타원 B는 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타원 C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를 각각 가리킨다. 타원 A에는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수행한,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로 대표되는 생태마르크스주의 연구를 포함한다. 포스터의 핵심 이론인 신진대사 균열론은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영양물질이 대량 이동하면서 토양의 비옥도가 감소하고, 도시는 폐기물로 오염되는 등 사회와 자연 간 물질 순환이 단절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와 동료들은 이 개념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여, 자원을 착취당하는 남반구와 소비 중심의 북반구 간 불균형 구조를 통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분석한다(황진태·박배균, 2013: 352~353).

2000년대에 김민정(2007; 2009)의 연구는 국내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던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기여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국내 비판적 사회과학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신진대사 균열론의 의의와 한계를 다룬 논의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김민정, 2016, 2021; 이광근, 2022). 특히,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사이토 코헤이(Saito Kohei)의 논문들(2017; 2019; 2020)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이토 코헤이는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들을 통해, 그가 『자본론』 집필 이후에도

생태학적 문제(특히 토양 황폐화와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모순)에 깊이 천착했음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제주의적으로만 해석했던 마르크스를 생태적 사유의 사상가로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신진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연구》가 그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과 달리, 국내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후속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구현(2024)은 《마르크스주의 연구》 창간 20주년을 맞아 동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생태마르크스주의 연구는 주요 영역으로 포착되지 않았다. 물론 방대한 논문들을 개인 연구자가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논의가 누락될 수는 있다. 그러나 참고문헌에는 앞서 언급한 사이토 코헤이의 논문들이 수록되지 않았고, 김민정의 초기 연구들(2007; 2009)이 생략된 채 최근 기후변화 관련 논문들(김민정, 2015; 김민정·이상준, 2023)만 언급된 점은, 국내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 환경 관련 논의의 입지가 여전히 주변적임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지속된다면, 사이토 코헤이(1987년생)와 같은 신진 생태마르크스주의 연구자가 국내 학계에 등장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국내 생태마르크스주의 연구동향을 통해 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할 국내 학자층은 빈약하지만) 최신 논의가 학계에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의 맥락 속에서 신진대사 균열론을 검토한 국내 생태마르크스주의 연구자가 있더라면 〈그림 1〉의 타원 A에만 머물고 있는 생태마르크스주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일찍이 황진태·박배균(2013)은 신진대사 균열론이 국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생태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태근대화론이 주장하는 ‘국가를 포함한 제도의 근대화를 통해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판하는 데 그치며, 국가는 자본축적을 위해 자연을 필연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York and Rosa, 2003; Clark and York, 2005).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미래상에서도 국가는 배제된 채 소규모 단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만이 언급된다(황진태·박배균, 2013: 353). 생태사회주의 실현의 사례로 종종 소개되는 쿠바의 유기농업이나 중국의 생태문명 국가전략에서도 국가(또는 당)의 역할이 일정 부분 드러나지만, 이를 분석한 생태마르크스주

의 연구자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국가를 명확히 개념화하지 않으며, 사례 분석에서도 농민이나 민중의 역할을 강조할 뿐 국가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난다(강연자·황진태, 2024: 149~151).

다음으로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주목한 타원 B는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이 주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접근은 국가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사회세력 간의 역동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구성되는 효과로 이해한다. 제습에 따르면 국가는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을 통해 특정 사회세력이나 담론에 보다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모든 사회세력에 대해 동일하게 열려 있는 장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자나 전략이 선택되고 강화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성은 결정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세력 간의 투쟁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국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즉, 국가는 일관된 주체라기보다는 정치적 투쟁이 전개되는 장이자 그 산물로 이해된다(제습, 2024).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국내 사회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예컨대 발전주의 시기, 국가 관료의 계획합리성에 따라 국가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베버주의적 국가론을 비판하며, 국가 안팎의 다양한 사회세력 간 갈등과 경합, 타협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이러한 분석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로써 타원 A와 달리 타원 B는 해외이론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한국의 맥락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기의 발전주의 국가가 추진한 국가정책(수자원 정책, 공업단지 정책, 도시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나, 1990년대 후반 정치·경제적 자유화 이후 변화한 국가형태에 관한 다채로운 연구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지주형, 2011, 2016; 박배균, 2009; 손정원, 2006; 이준형, 2023; 최영화, 2013; 황진태, 2019; 황진태·박배균, 2014; Park, 2008; Hwang, 2017).

현재 국내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타원 B에 공감해 온 일부 연구자들이 타원 C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나타났고, 본 논문의 핵심 연구 초점이다. 그러나 타원 A 역시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사회와 자연(타원 A), 국가와 사회(타원 B), 자연과 국가(타원 C)

를 아우르는 이론적 협력(A+B+C)을 통해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의의

1) 정치생태학에 관한 밥 제쇼프의 인식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제쇼프가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학자로서의 일대기에서 비교적 최근이다(Jessop and Morgan, 2022: 103).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정초한 저서인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Jessop, 1990)를 시작으로 그가 단독 집필한 국가 관련 저서들을 통해서도 정치생태학에 대한 관심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State Theory* 출간 이후, 12년 만인 2002년에 출간한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Jessop, 2002)는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형태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어서 *State Power* (Jessop, 2007)는 전략관계적 접근에 영향을 준 이론(마르크스, 폴란자스, 그람시, 푸코)과 확장 가능성(젠더 이론, 문화정치경제학 등)을 논했지만,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 이 책의 출간시기가 2007년이라는 점에서 정치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직전에 탈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5년에 출간된 *The State: Past, Present, Future* (Jessop, 2015)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언급과 이것이 국가의 제도적, 공간적 선택성에 미칠 영향(Jessop, 2015: 198, 209, 244, 248)을 비중 있게 논하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책 제목에 공통적으로 미래 단어가 포함된 2002년과 2015년 저서에서 후속작에서만 미래를 구성하는 요소에 자연, 환경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그의 변화된 사고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쇼프가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정치생태학을 전략관계적 접근에 어떻게 결합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제쇼프의 생각은 두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Jessop, 2012; 2017).

제습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2007년 12월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니코스 폴란차스 연구소가 초청하여 발표한 강연 원고이다(Jessop, 2017).³⁾ 강연원고의 제목은 “니코스 폴란차스의 정치경제, 정치생태학 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론”이다. 이 제목만 본다면 마치 폴란차스가 정치생태학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폴란차스는 자신의 연구에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Jessop, 2017: 193). 즉, 이 원고의 제목은 폴란차스를 매개로 제습 본인이 관심 두기 시작한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려 한 의도가 다분하다.⁴⁾

제습에 따르면, 폴란차스가 생을 마감한⁵⁾ 1970년대에 그의 주요 관심사는 그리스와 프랑스 정치였는데, 계급운동에 비해 여성운동, 학생운동과 함께 환경운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1970년대 중후반에 발생한 제1, 2차 오일쇼크를 통해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자본축적 방식이 환경적 한계에 직면한 것을 폴란차스도 목격했지만, 그의 분석에서 다루지지는 못했다(Jessop, 2017: 193). 그리하여 제습의 강연원고는 ‘만약 폴란차스가 지금 살아있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제습은 폴란차스가 국가연구에 자연을 고려했다면, 그 관계는 생태중심적이거나 인간중심적 설명 모두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밝힌다(Jessop, 2017: 194~195). 인간을 이성적 주체로 간주하고, 자연을 인간의 타자로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간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론적으로 분리시키며, 그 결과 환경문제의 사회정치적 원인을 은폐하려 한다. 한편, 전체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는 종종 보편적 자연을 낭만적으로 전제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고유성과 권력관계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또한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가 설정한 ‘인간(주체) vs. 자연(객체)’ 구도를 역전시켜 ‘자연(주체) vs. 인간

3) 이 강연은 2007년에 있었지만, 학술지 게재는 2017년이였다. 여기서는 강연 시점을 기준으로 Jessop(2017)을 첫 번째 연구로 간주한다.

4) 폴란차스의 국가연구가 제습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에 이러한 폴란차스의 입장을 가정한 글쓰기 방식도 가능했다. “나(제습-인용자 주) 자신의 작업이 그(폴란차스-인용자 주)의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명백히 영향 받아 왔던 한 사람”(제습, 1996: 7)이라고 밝혔듯이, 제습이 폴란차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저서 곳곳에서 확인된다.

5) 폴란차스는 1979년 10월 3일 투신자살했다.

(객체)’으로 재구성한 것에 머물면서 이분법 자체를 해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긴밀하고 상호적 관계를 충분히 조망하기 어렵다(Castree and Braun, 2001; Gerber, 1997; Doudaki and Carpentier, 2025).

폴란차스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모두 거부했을 것이라는 제습의 예상은 정치생태학에서 전개된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을 제습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⁶⁾ 이처럼 정치생태학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적 접근의 지향은 제습의 전략관계적 접근과 이론적 친밀성이 있다. 그리하여 제습은 폴란차스가 “자연과 인간성의 형식들, 그리고 물론 그것들의 변화하는 연결 양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역사화된 관계적 접근을 선호했을 것”(Jessop, 2017: 195)으로 추정했다.

‘비판적이고 역사화된 관계적 접근’의 보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지구적 규모에서 심화되는 생태위기가 자본축적과 그것의 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경제적 영역과 비경제적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이며, 환경 의제의 부상이 국가 안팎의 계급 분파 간의 갈등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폴란차스가 주목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습이 강연을 했던 2007년 무렵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심화하는 환경 위기를 직접 목격한 개인적 차원의 경험과도 무관치 않으리라고 추정된다. 2007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하며 해수면 상승과 극한 기후 등의 구체적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으로 기후위기 경고의 정당성을 크게 높였다(IPCC, 2007). 또한 지구온난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한 앨 고어 전(前) 미국 부통령과 IPCC는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인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로로 같은 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2007년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가 핵심의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제습이 거주하던 영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여름 대홍수가 2007년에 발생해

6) 제습은 사회학자이지만, 지리학자들과 상당히 긴밀한 교류를 해왔고, 지리학 학술지에도 여러 논문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정치생태학 논의에도 익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뒤에서 소개할 국가-자연 개념을 제시한 지리학자들(Whitehead et al., 2007)의 책에서도 저자들은 제습과의 지적 교류를 밝혔다.

13명이 사망하고 약 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Environment Agency, 2007). 더불어 같은 해 전 세계 곳곳에서도 극심한 기상이변과 재난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제습 역시 이러한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⁷⁾

Jessop(2012)의 녹색 뉴딜 분석은 그가 폴란차스 연구소 강연에서 논의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연구이다. 이 논문에서 제습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상한 녹색 뉴딜을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환경위기로 구성된 ‘삼중위기’에 대응하려는 ‘경제적·생태적 상상(economic-cum-ecological imaginary)’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상상’은 단순히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떠올리는 재현이 아니라, 다수가 바라는 현실을 구성하고 묘사하며,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고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인식 틀을 의미한다.

제습이 제시한 경제적·생태적 상상은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먼저, 경제적 상상은 자본 중심적 상상과 실질적 제공(substantive provisioning) 중심 상상으로 나뉜다. 자본 중심적 상상은 이윤추구와 시장을 통한 축적을 핵심으로 하며, 사회적 관계와 자연까지도 상품화하려는 경향을 띤다. 반면, 실질적 제공 중심 상상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의 충족에 주목하며, 비시장적 관계와 사용가치를 중시하고, 교환보다 생존과 복지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강조한다.

한편, 생태적 상상은 인간 중심성을 넘어서 자연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는 가이아(Gaia)적 세계관부터 지역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공간적 지평을 포괄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성과 복합적 연계를 강조한다(Jessop, 2012: 18).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자본 중심적 상상이 실질적 제공 중심 상상이나 생태적 상상을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제습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복원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마법 탄환(magic bullet)’처럼 묘사되는 녹색 뉴딜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녹색 뉴딜이 삼중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념적 반영에 불과

7) 위험사회 개념을 고안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위험경관(riskscape) 개념을 고안한 테틀레프 뮐러만(Detlef Müller-Mahn)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각 개념을 고안하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다(황진태, 2016).

하다고 지적한다(Jessop, 2012: 21). 따라서 보다 생태 친화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정량적 제한, 성장의 재분배, 무성장(no growth)과 같은 대안적 경제의 상상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제습은 녹색 뉴딜을 경제적·생태적 상상의 결합된 형태로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서 제시한 축적전략, 국가 프로젝트, 헤게모니 비전 등의 개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Jessop, 2012: 2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상이라는 개념이 헤게모니 프로젝트(hegemonic project)의 분석 범위를 한층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상상과 생태적 상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때로는 성장주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상호 충돌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와 생태적 위기가 중첩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위기를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는 두 상상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연을 국가나 사회로부터 낭만적으로 분리하거나 고립시키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위기와 자연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습의 정치생태학에 대한 관심과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확장에 대한 야심찬 표명과는 달리 앞서 살핀 두 편의 짧은 논문을 제외하면 그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도리어 두 논문에서는 ‘비판적이고 역사화된 관계적 접근’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도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첫째, 그의 사례 분석(금융위기, 기후위기)은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 초점을 맞추며 자연을 자본주의 메커니즘 내부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폴란차스 연구소 강연에서 제습은 자연을 단순히 자본축적의 논리로 환원하지 않고, 비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1차 자연과 2차 자연⁸⁾을 구분하여 자연의 다양한 존재 가능성을 인지했다(Jessop, 2017: 194).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자본주의 위기(또는 발전) 과정에서 자원으로 전환된 자연의 형태에만 주목할 뿐, 자본주의 메커니즘 바깥에 있었던 자연이 어떻게 자원으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환 과정이 자본의 기대에 따라

8) 1차 자연은 인간의 개입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즉 원시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의미하고, 2차 자연은 인간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변형된 자연으로, 농지, 도시 등 인간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연을 뜻한다.

순조로웠는지, 혹은 예상치 못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의 저항에 직면했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 그 결과, 분석은 자본 중심적 시각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생태적 위기를 지나치게 최근의 현상으로 한정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제습의 논의는 가장 이른 사례로 1970년대 석유파동을, 가장 최근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 위기가 최근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동시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비판적이고 역사화된 관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습이 생태 문제를 “삶의 주변부에서 현대 정치의 핵심”(Jessop, 2017: 196)으로 이동했다고 서술하거나, “생태 위기의 세계화 경향”(Jessop, 2017: 195)을 언급하는 것은 생태 문제가 주변부에 머물렀던 시기나 세계화 경향이 나타나기 이전의 시공간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조망하는 역사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그가 강조한 역사화된 접근과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제습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역사화하고, 이를 통해 생태적 위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정치생태학적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자연을 정치의 구성 요소로 사유하려는 점에서 전략관계적 접근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례분석에서는 자연을 자본주의 위기담론의 일부로 환원하거나 최근의 현상에 한정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 요구되는 정치생태학적 상상의 폭을 제약한다. 다음 항에서 보듯, 이러한 한계는 제습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되고 있다. 특히, 지리학자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가 처음 제안한 ‘국가-자연’ 개념을 주목할 수 있다.

2)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활용한 국가와 자연 관계 연구

정치생태학은 사회(인간)와 자연의 이분법적 인식을 비판하며, 양자 간 상호작용에 주목해 왔다(Castree and Braun, 2001; Gerber, 1997). 이러한 정치생태학 연구는 기업,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을 분석 대상

으로 삼지만, 기존 연구는 국가가 갖는 고유한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다 (Robbins, 2008). 즉, 세계화 시대를 맞아 사람, 자본, 정보의 흐름은 국경을 넘어 더욱 자유로워졌지만, 국가는 여전히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정을 조절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적 통합체’로 작동한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분석 단위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황진태·박배균, 2013: 357~358).

제습은 국가이론에서 출발해 정치생태학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했지만, 화이트헤드 외(2017)는 정치생태학 이론에서 국가로 관심을 확장하였다. 지리학자들의 시각에서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추상 수준이 높게 인식되어, 실제 국가와 자연이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매개로 자연과 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공간이론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화이트헤드 외는 국가-자연 개념을 제안한다.

국가-자연 개념은 자연이 본래 갖고 있던 생태적 맥락이 제거된,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을 지칭한다. 즉, 자연과 국가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이 개념은 특정한 자연(특히 지역의 자연들)의 차이를 지우고, 국가적 질서 안에서 자연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화이트헤드 외(2007: 14~16)는 이러한 연결이 지속되기 위해 틀 짓기(framing), 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영역화(territorialization)라는 세 가지 공간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⁹⁾

한편 화이트헤드 외는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개념 등 비판적 이론들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국가-자연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Whitehead et al., 2007: Ch. 2).

이후 이 개념을 전략관계적 국가이론과 정교하게 접합한 연구로는 황진태·박배균(2013)이 있다. 이들은 국가-자연을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 행위자들이 기후, 물, 식생, 지형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하여, 담론적·물질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

9) “틀 짓기는 다양한 맥락 속에 다채롭게 존재하는 사물들을 단일한 틀에 가두려는 과정을 가리키며, 중앙집중화는 복잡한 실체인 자연을 표준화된 지식으로 통일하려는 과정을 의미하며, 영역화는 자연을 통제하기 위한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이다”(황진태, 2025a: 118).

자 결과로 정의하였다(황진태·박배균, 2013: 358). 이 정의에서는 자연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행위자들의 역동성이 강조된다.¹⁰⁾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가 국가-자연을 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자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면, 황진태·박배균(2013: 360)은 글로벌-자연, 국가-자연, 지역-자연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사회세력들이 상이한 이해관계, 목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로써 전략관계적 접근이 추구하는 사회세력 간의 갈등, 경합, 타협의 역동성과 국가-자연의 생산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한 것이다.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가 국가-자연을 제시한 이래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이 국내 학계에서 시도되었다. 특히, 황진태·박배균(2013)이 제안한 전략관계적 접근을 접목한 국가-자연 분석틀을 활용하여 상당한 연구들이 누적되었다. 사례연구의 대상을 분류하면, 하천, 산, 바다/해안, 환경오염, 도시화, 비인간 등이 있고,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식민주의, 발전주의, 포스트 발전주의 시기에 형성된 국가-자연이 분석되었다(황진태, 2025a). 이러한 관련 연구의 풍부한 축적은 제습이 강조한 ‘비판적이고 역사화된 관계적 접근’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국가-자연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배경에는 근대화·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의 역할이 작용해 왔다는 점과 국내 사회과학 연구에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으로 대표되는 국가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국가론을 확장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국가-자연 개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황진태·박배균, 2013; 황진태, 2025a; 김준수, 2018; 김지영, 2024).

대표적으로 황진태(Hwang, 2015)는 박정희 정권의 수자원 정책을 사례로, 지역의 자연이자 자유재였던 물이 어떻게 국가의 국유재로 전환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은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가 제시한 세 가지 공간전략을 통해 살펴보았다.

10)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 16)는 국가-자연 개념의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면서 틀 짓기, 중앙집중화, 영역화의 세 가지 요인만을 넣었다면, 황진태·박배균(2013: 358)은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핵심 개념들인 축적전략,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앞의 요인들과 결합한 다이어그램을 제시했다.

첫째, 틀 짓기의 과정으로서 1960년대 ‘수자원(水資源)’ 용어가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하며, 자원의 관점이 물에 투영되기 시작했다. 둘째, 중앙집중화 과정으로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들(건설부 산하 수자원국,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설립과 국가통계인 수자원개발조사연보가 구축된다. 셋째, 영역화의 과정으로서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개별적인 하천들이 ‘4대강 유역’이라는 단일한 국가 스케일로 제도적·담론적·물질적으로 재구성된다. 더불어, 이러한 국가-자연의 형성은 국가 관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전략을 가지고 경합한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정치주의(관료의 역할 강조)나 경제주의(자본의 역할 강조) 어느 한쪽으로 귀속되지 않는 전략관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맥락에서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물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변환되는 물질적, 담론적, 제도적 과정을 살폈다. 반면, 김지영(2024)의 국립공원 연구와 최영래(Choi, 2023)의 간척사업 연구는 시기적으로 박정희 정권보다 더 앞서,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가-자연의 근대적 기원을 추적하는 역사적 분석을 시도했다. 식민주의를 포함한 이들 연구는 박정희 정권을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황진태의 분석에 대한 시간적 확장을 했다.

제습이 강조했듯이, 역사적 분석은 최근의 현상인 녹색 뉴딜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Jessop, 2012).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지구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녹색 뉴딜 및 녹색성장 담론이 한국 정부를 매개로 수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Hwang et al., 2017). 이 연구는 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생태 위기의 세계화 경향’(Jessop, 2017: 195)뿐만 아니라, 한국 발전주의 시기의 경로의존성(즉, 고도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인프라 관련 국가 부처와 건설 자본의 성장 그리고 성장 지향 담론 속에서 ‘녹색’ 용어가 전유되는 방식)이 어떻게 접합되었는지를 밝혔다.

정리하면, 그동안 국내 학계에 축적된 국가-자연 연구는 제습이 추구한 ‘비판적이고 역사화된 관계적 접근’을 상당히 충족하는 성과를 얻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축적된 국가-자연 연구를 인간 너머의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4.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한계

1) 전략관계적 국가이론과 인간중심주의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비록 구체적인 사례 분석은 다른 학자들이 주도했지만,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정초한 제습 본인이 정치생태학으로의 관심 확장이 없었다면 그러한 후속 연구도 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조응하여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 비평이 필요하다.

앞서 폴란차스 연구소 강연원고에서 확인했듯이, 제습은 인간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자신이 고안한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이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인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의 *The State: Past, Present, Future* (Jessop, 2015)는 이전 단독 저서들과 달리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 논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평을 시작하기에 적절하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자본주의 국가의 가까운 미래를 전망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거시적 추세를 밝힌다. 첫째, 국가와 자본 간의 경쟁에서 자본축적이 우선하면서 글로벌, 권역적(regional), 지역적 환경위기의 심화, 둘째, 과잉인구, 부의 양극화와 같은 세계경제의 모순과 위기경향성의 심화, 셋째,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의 지속적인 약화와 중국의 부상, 넷째,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시민사회를 배제하려는 초국가적 체제의 강화를 들었다(Jessop, 2015: 244-245).

이 네 가지 추세 중에 환경위기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연관하여 네 가지 추세들은 국가형태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는 국가를 “광범위한 정치체계뿐 아니라, 자연적·사회적 환경 전반 속에 자리 잡고”(Jessop, 2015: 248) 있다고 보면서 자연과 국가의 관계적 이해

를 다시 강조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사회세력에 대해 제습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고정된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소유하거나 행사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세력 간의 갈등과 협상, 그리고 이들이 국가라는 제도적 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권력이 형성되고 발현된다. 그런데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제습은 기존 전략관계적 국가이론과 비교하면, 국가권력의 행사에는 “인식되지 않은 조건들(unacknowledged conditions)”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들(unanticipated consequences)”이 초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Jessop, 2015: 247). 이는 사회세력 간 상호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 불확실성이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강조는 더 이상 국가를 인간들의 정치체계 내부에 위치시키는 것을 넘어서, 자연적·사회적 환경이라는 외생적 변수 속에 국가가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습은 이 책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진 않지만, 국가의 미래를 다룬 마지막 장에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환경적 조건을 언급한 점은, 이를 향후 정치생태학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이론적 여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는 자연을 현재의 분석 중심으로 끌어오진 않았지만, 국가이론의 미래 과제로 남겨둔 셈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국가뿐 아니라 사회세력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제습은 책의 다른 장에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초국경적 문제들로 인해, 전통적으로 국가라는 영역적 단위에 기초해 형성되던 운명공동체와 상상된 일반이익(imagined general interest)의 범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탈국가적(postnational) 정체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탈국가적 정체성의 유형으로 1) 세계시민적 정체성의 등장, 2) 종교·민족 등 원초적 정체성으로의 회귀, 3) 다양한 가치, 정체성, 이해 관계를 유연하게 동원하는 다원적·비대립적 정체성의 확산을 들고 있다(Jessop, 2015: 161-162). 이 중 세 번째 가능성은 기존 사회세력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되고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가권력 형성의 조건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습은 ‘인식되지 않은 조건들’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사회세력의 성격과 경로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그의 이론적 지

평 안에 열어두고 있다.

제습은 국가형태의 변화 요인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조건을 새롭게 주목하며, 자본축적 과정에서 자연이 갖는 자원적 중요성 역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서 자연을 중요 분석 변수로 포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그의 국가이론은 여전히 자연을 인간 사회의 외재적 조건 혹은 자원의 공급 기반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제하는 인간 중심적, 자본 중심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이 자원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한계나 돌이킬 수 없는 환경변화의 가능성, 혹은 자연 자체의 반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더불어, 자연의 훼손에 저항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비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세력들(동물권 운동, 원주민 공동체의 자원개발 반대 및 공동관리 등)이 국가의 선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관계적 접근에서 충분히 이론화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습의 국가이론은 국가가 사회세력 간의 전략적 균형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자연과의 상호작용이나 생태적 제약이 사회세력과 국가역할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는 향후 전략관계적 접근이 정치생태학 논의와 결합하여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2) 인간 너머의 시선에서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재이론화 탐색

(1)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¹¹⁾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은 제습이 미뤘던 국가이론의 미래 과제를 일부 진전시키고자 제안되었다(Hwang, 2021).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이 인간중심주의에 빠

11) 본고에서 소개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에 대한 설명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술을 일정 부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Hwang(2021), 김준수 외(2022), 황진태(2025a) 등]. 해당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최소한의 중복은 있지만, 본 논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습의 논의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보완을 하였다.

져있다는 근거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인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주로 자본주의의 동학과 연관된 자연, 즉 ‘2차 자연’에 주목하며 자본 중심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이 자본축적의 논리에 포섭되기 이전, 이른바 ‘1차 자연’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연이 자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인간의 의도대로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전제는 인간과 자본 중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저항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

제습은 폴란차스 연구소 강연에서 자본축적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자연의 존재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 틀 안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축적의 논리로 환원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같은 강연에서 제습이 강조한 ‘비판적이고 역사화된 관계적 접근’이 요청된다.

둘째,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인간의 필요에 주목하는 반면, 비인간의 필요는 간과한다. 이러한 비판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핵심 개념인 전략을 수립하는 주체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인간 집단 간의 상이한 필요, 전략, 계획의 충돌 속에서 역동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는 개인들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유사한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이러한 집단이 사회세력이 되어 국가의 제도적·공간적 선택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사회세력들 사이에서 자연의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충돌과 갈등, 타협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정치생태학적 확장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사회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는 제습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질문이다. 인간의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치 모두 인간의 필요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적이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비인간 존재들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인간에게 직접 전달할 수는 없지만, 동물권 단체나 변호사, 동물권을 지향하는 정당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권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은 비인간의 필요를 매개하는 인간들의 사회세력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컨대, 호주의 동물정의당(Animal Justice Party)은 2009년 설립되어 2011년 정식 등록된 정당으로, 동물권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 정당은 주의회와 시의회에 정치인을 진출시킴으로써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제도권 정치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정치에서도 비인간의 필요를 대변하는 인간들의 사회세력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실천을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합리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비인간은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킨다. 이성과 합리성은 인간을 비인간과 구별 짓는 핵심 속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의사결정에서도 비인간 존재는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전략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확산은 비인간 행위자인 바이러스가 인간의 전략과 정책 결정에 강력하게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존의 보건, 외교, 경제 전략을 전면 수정했고, 특히 이동 통제, 감염병 대응체계, 공급망 재편 등은 바이러스의 비의도적 행위성에 따라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끊임없이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Searle and Turnbull, 2020; Baker et al., 2022).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면, 인간이 수립하는 전략의 영역 또한 비인간적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습은 *The State* (Jessop, 2015)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에는 ‘인식되지 않은 조건들’이 작용하며,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Jessop, 2015: 247). 이러한 통찰은 전략이 단지 인간 행위자의 계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요소들(예컨대 자연재해, 바이러스, 기후변화, 인프라 시스템 등)에 의해 구성되고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전략은 더 이상 인간의 합리적 선택만이 아니라, 인간-비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실천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전략 형성의 구성적 조건들에 대한 이론화로 이어진다.

제습의 전략적 선택성 개념은 국가가 특정 사회세력이나 담론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대체로 비인간의 존재나 작용을 배경 조건으로만 간주한다. 이에 반해 필자는 전략적 선택성 개념을 비인

간의 행위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를 강조한다. 가령, 특정 인프라의 노후화가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가 안보 전략의 재편을 유도하는 경우, 비인간 조건이 전략 형성 과정의 실질적 선택성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여기서 처음 제시하는 ‘인간 너머의 선택성(more-than-human selectivity)’ 개념은 인간-비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전략적 선택성 자체의 구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전략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의 역량과 조건이 교차하는 장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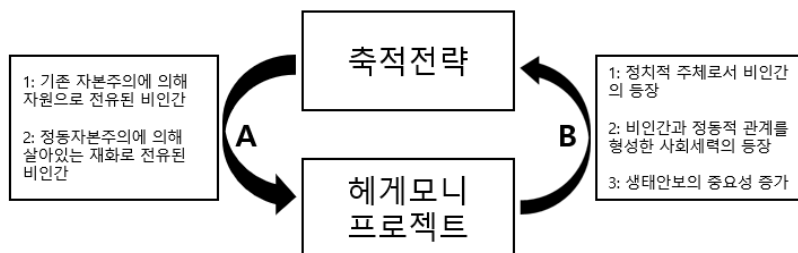
넷째, 앞서 지적한 인간 중심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자연 인식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 제습은 사회운동을 자본주의의 동학과 연관을 지어 이해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사회운동이 자본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인간 존재의 필요를 대변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기존의 분석 틀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대안적 사회운동의 방향을 구상하려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 내재된 인간중심주의는 이러한 상상력을 제약할 수 있다

제습의 분석은 주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위기 국면에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위기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위기가 아닌 시기 또는 위기를 지난 이후의 국면에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사유하려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

제습은 *The State* (2015: 232-233)에서 환경운동과 동물권 운동을 안보국가(security state) 맥락 속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9·11 테러 이후, 전통적인 테러와는 거리가 있었던 대중운동을 역시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제습은 그 예로 환경운동과 동물권 운동을 들었다.

이는 테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미약하더라도, 다른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운동들이 전통적인 대중운동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다른 요인’에는 비경제적 요인이나 비인간의 필요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관리 가능한’ 대중운동에서 보다 급진적인 운동으로의 전환 가능성

<그림 2>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위한 분석 틀



출처: 김준수 외(2022: 11)를 일부 보완함

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 내재된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짚고서, <그림 2>는 인간 너머의 시각에서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수정을 시도한 분석 틀이다.

분석 틀의 기본 구성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핵심 개념인 추적전략(자본 간 결합 속에서 특정 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성장 모델)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선택된 추적전략을 정당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동의를 형성하려는 담론과 실천) 사이의 연계를 바탕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을 투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경로 A는 기존 자본주의적 추적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비인간이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로를, 경로 B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인간을 향한 정동적(affective) 관계가 국가정책과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치적 경로를 지칭한다.

경로 A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의 1은 비인간 존재가 자원으로 동원되며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A의 2는 기존 자본주의 국가형태가 비인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추적전략에 흡수·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인간은 녹색 뉴딜과 같은 친환경 담론 속에서 자연을 덜 파괴하거나 보존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인간은 정동자본주의(affective capitalism)하에서 인간-비인간 간 정동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추적 대상이 된다.

한편 경로 B는 추적전략이 아닌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변화가 국가 선택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B의 1은 기존 추적전략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비인간의 반응 또는 반발이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는 사례다. 예컨대 4

대강 사업 당시 큰빛이끼벌레의 출현은 비인간 존재가 더 이상 사회현상의 배경이 아닌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B의 2는 비인간을 위한 집단적 정치 실천이 시민들에 의해 촉발되고, 그것이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돌고래 제돌이의 방생이나 동물원 폐쇄 청원, 동물정의당의 활동 등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정동적 연대와 윤리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비인간 의제가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고도성장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는 축적 중심의 전략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헤게모니 구축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비인간과 정동적으로 연결된 시민들(zoophiles)이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B의 3은 생태안보(ecological security)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의 범주가 인간을 넘어 비인간과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 개념은 전통적으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재해·재난, 환경파괴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생명과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중심에 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조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생태안보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안보 개념은 더욱 포괄적이고 생태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최병두, 2020). 비록 생태안보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지만, 과거의 국가-자연 관계를 재해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쥐잡기 운동이나 기생충 박멸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한 발전주의 국가가 들쥐나 미생물과 같은 자연을 통제·관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축적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비인간 행위자의 역능을 포착할 수 있다(최명애, 2022: 113). 또 다른 예로는 남북한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간만을 통일의 주체로 간주하는 기존 시각을 넘어 생태안보의 관점에서 비인간 존재를 통일의 주체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황진태, 2025b).

경로 B의 영역은 앞서 살핀 국가-자연의 공간전략(즉, 틀 짓기, 중앙집중화, 영역화)을 재사유하는 데에도 유의미하다. 예컨대, 동식물의 자율적 회복을 통해 인간의 지속적인 관리 없이도 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자원 복원 전략

인 재야생화(rewilding)에 주목할 수 있다(최명애, 2021). 재야생화는 지역마다 목표와 범주가 다르지만,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관리를 중시해 온 근대적 보전 방식이 비인간을 수동적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재야생화는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하고 열린 미래를 지향한다.

이처럼 실험적 성격이 강한 재야생화 프로젝트는 국립공원과 같은 전통적인 국가-자연 공간뿐 아니라, 버려진 농경지나 도시 변두리처럼 인간이 일시적으로 이용했던 장소들에도 적용된다(최명애, 2021). 특히 국가가 자본축적을 위한 개발 공간이 아닌, 이윤 창출과 거리가 먼 재야생화 공간으로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자원과 기술을 투입하는 과정은, 새로운 형태의 틀 짓기, 중앙집중화, 영역화 과정을 수반한다.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은 이러한 재야생화 사례에서 비인간 행위성이 어떻게 강조되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기존의 국가-자연 공간 전략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재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국가이론은 인간만을 정치적 행위자로 간주해 왔지만, 비인간 존재 또한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존 국가이론에서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전통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담론, 이데올로기, 실천 등을 통해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정동과 윤리성이 결합된 시민들의 실천이 비인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헤게모니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인간-비인간 관계 자체가 헤게모니 형성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인간-비인간 관계를 통한 새로운 헤게모니의 가능성이 곧 기존 자본주의 국가 형태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인간 존재는 자원으로 전환되거나, 인간과의 정동적 관계가 새로운 축적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 결국 인간 내부의 갈등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결합과 정치적 재구성 또한 국가의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2) 전략관계적 접근의 시각에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에 대한 비평

앞서 논의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은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 내재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한편, 전략관계적 접근의 입장에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보기 드문 논의로 박지훈(2022)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이론의 보완 지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박지훈, 2022: 114).

첫째,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다루면서 사회이론으로서의 전략관계적 접근과 정치이론으로서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박지훈에 따르면, 제습의 전략관계적 접근은 사회구조와 행위성의 관계, 더 나아가 사회구성체의 응집, 재생산, 변동 등을 다루는 사회이론적 틀임을 강조하며, 정치이론으로서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과 구분된다.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에서는 이처럼 사회이론과 정치이론 사이의 구분이 충분히 명료하지 않았기에,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위한 사회이론적 기초 작업이 결여되었다고 평한다.

흥미롭게도 박지훈(2020: 488)은 전략관계적 접근을 정치이론으로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인물로 제습을 지목한다. 이는 제습이 전략관계적 접근을 사회이론과 정치이론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했음에도, 그의 실제 연구가 국가 분석에 집중됨으로써 이후 전략관계적 접근 자체가 정치이론으로 인식되게 했다는 것이다. 전략관계적 접근의 사회이론적 측면이 간과되도록 만든 “가장 큰 과오”(박지훈, 2020: 488)가 제습에게 있었다는 역설과 무관하게,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이 인간과 비인간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회를 분석하는 사회이론의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연관성을 더욱 풍부하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예컨대, 〈그림 2〉는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를 축적 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사회의 영역은 ‘사회세력’으로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비인간 관계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 가치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제습이 언급한 국가권력의 행사에서의 “인식되지 않은 조건들(unacknowledged conditions)”(Jessop, 2015: 247)은 자연과 더불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을 가리키며, 이러한 조건들을 인식하고 분석할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은 동아시아 국가 맥락에서의 이론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박지훈(2022: 114)은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이 축적전략, 국가전략, 국가형태, 헤게모니 프로젝트 등의 개념들로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은 제습의 연구에서 핵심적이지만, 그의 전체 지적 여정 속에서는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지훈은 제습이 수행한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들(예컨대 수출주의, 포스트수출주의, 리스트적 근로연계복지 국민국가 등)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제안한 Hwang(2021)의 논문은 국가 개념에 대한 추상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라는 중범위 수준에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구체화하려 했다. 이는 저자가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험을 이론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박지훈의 지적처럼, 구체적인 국가나 지역의 맥락에서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했다면, 제습(그리고 그의 연구 동반자인 나일링 섬(Ngai-Ling Sum))의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참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Jessop, 2016a; 2016b; Jessop and Sum, 2006).

다만 박지훈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Hwang(2021)의 저자인 필자는 해당 논문의 집필 과정을 반추할 때, 지역적 맥락을 경유하지 않고 보다 추상적인 층위에서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개념화하려는 의도와, 동아시아라는 중범위 층위에서 구체적인 국가형태를 분석하려는 의도 사이에서 ‘방황’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추상 수준들 간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며,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밥 제습의 사회이론, 정치이론, 구체적 사례 분석은 모두 비판적 실재론이라는 사회과학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에서는 이 철학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곧 앞서 제시한 첫 번째 비판 지점, 즉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에서 사회 영역의 확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비환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전략관계적 접근의 철학적 토대를 형성한다(Jessop, 2005). 따라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제습의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우회하지 않고 재이론화하려는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에서 비판적 실재론은 핵심적 논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판적 실재론과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 사이에 몇 가지 이론적 긴장, 충돌 지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행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필자는 앞서 제습이 전략관계적 접근에서 비인간이 사회세력의 일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사유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정치생태학의 최근 논의에서는 신유물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판적 실재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Knudsen, 202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유물론이 비인간 행위성의 적극적 수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략관계적 접근도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비판적 실재론이 과연 비인간의 행위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실재론이 제시하는 현실(reality)의 세 층위[실재적(the real), 현실적(the actual), 경험적(the empirical)]을 고려할 때,¹²⁾ 비인간 행위성을 실재적 층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재적 층위는 보이지 않지만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기저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영역이며, 이 층위에서 자본주의나 가부장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간과된 비인간의 행위성 역시 위치할 수 있다. 비인간의 영향력이 직접 경험되거나 인식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작용하는 잠재적 메커니즘으로 존재한다면, 비판적 실재론과 탈인간중심주의는 이론적으로 조율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정리하면,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은 현재 비판적 실재론과 신유물론 사이에 놓여 있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두 이론 간의 철학적 긴장을 인식하면서도, 비인간 행위성과 구조적 설명 간의 이론적 절충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12) 실재적 층위는 보이지 않지만,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기저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층위를 가리키며, 현실적 층위는 기저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층위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험적 층위는 개인이 직접 감각하고 인식한 사건이나 현상이 드러나는 층위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층위의 구분은 로이 바스카(Roy Bhaskar)가 주도했으며, 제습은 자신의 전략관계적 접근이 의존하는 비판적 실재론의 주요 연구자로 바스카를 비중 있게 인용한다(Jessop, 2005).

5. 결론: 제습을 넘어선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연구를 향하여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제안하며 필자가 시도한 작업은, 전통 정치경제학에 기반한 제습의 입장과 비인간의 행위성을 적극 수용하는 신유물론이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두 시각을 이론적으로 접합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 동료는 “굳이 인간 중심의 전략관계적 접근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신유물론에서 시작했다면 불필요한 논의를 우회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그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이론 작업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돌아가는 길을 택한 이유는 인간 너머의 시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단지 지구적 차원의 존재론적 변화 때문만은 아니며, 인간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비인간도 행위성을 지닌다는 주장을 곧바로 던진다면, 과연 쉽게 수용될 수 있을까? 오늘날 다수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국가 이해에 익숙하다. 그렇기에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에 내재된 인간중심주의를 드러내고 비판하면서도, 해당 이론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인간 너머의 관점에서 재이론화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인간 너머의 시각에서 직접 출발하는 것보다 인간들로부터 더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것을 기대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인간 중심적’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을 발전시켜 온 제습이 ‘비판적 정치경제학에 대한 기존의 관심을 정치생태학 비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게 된 배경을 추정하고, 그의 저작들을 검토함으로써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이 단순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단점을 넘어, 그 안에 인간 너머의 시선을 수용할 이론적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순과 긴장을 포착하는 과정은, 필자가 ‘제습의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명백히 영향 받아 왔던 한 사람’¹³⁾으로서 보다 섬세한 비평을 통해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13) 제습이 폴란자스를 두고 한 발언을 참조했다(각주 4 참조).

물론 이 비평을 통해 제습의 전략관계적 접근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세력 개념에 비인간을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습 개인의 입장은 더 이상 핵심 쟁점이 아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과 신유물론 사이의 긴장과 접점, 행위자 개념에 대한 절충적 혹은 새로운 해석 가능성 등을 탐색하며, 제습을 넘어서는 전략관계적 국가이론의 다음 단계를 열어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 국가와 동물(Narayanan, 2025), 국가와 물질(Meehan et al., 2013)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본 논문이 다룬 전략관계적 국가이론과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확장·심화하는 데 유의한 참조 문헌이자 비평의 대상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비평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21년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Hwang, 2021)을 제시한 이후 이론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점은 필자의 한계임을 밝힌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 2.0’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이론의 분석 틀에 생태안보의 중요성을 추가하고(〈그림 2〉의 B-3 항목), 인간 너머의 선택성 개념 등을 제시함으로써 1.5버전 정도의 진전을 이루고자 했다. 향후에는 동료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간 너머의 국가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16일 투고, 7월 8일 심사, 8월 1일 게재 확정)

□ 참고문헌

- 강연지·황진태. 2024. 「도시와 거름: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신진대사 관계 고찰」. 《공간과 사회》, 제34권 제2호, 142~182쪽.
- 김민정. 2007. 「자본주의와 환경 경영」.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4권 제2호, 140~163쪽.
- _____. 2009. 「자본 관계에서 고찰한 환경 불평등」.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6권 제1호, 92~121쪽.
- _____. 2015. 「한국 기후운동의 실상: 기후 활동가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3호, 123~151쪽.
- _____. 2016. 「인간과 자연 관계에 관한 생태 마르크스 이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제2호, 165~194쪽.
- _____. 2021. 「모호한 개념과 난잡한 서술로 구성된 마르크스 이론의 확장 시도가 낳은 폐해」.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5권 제2호, 187~198쪽.
- 김민정·이상준. 2023. 「한국 청년 기후운동의 특징과 한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와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학생기후행동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20권 제2호, 228~253쪽.
- 김준수. 2018.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 관계의 재조정: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 《공간과 사회》, 제28권 1호(통권 제63호), 55~100쪽.
- 김준수·이강원·최명애·박지훈·황진태. 2022. 「인간 너머의 국가론에 대한 다학제적 논평」.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제1호, 109~116쪽.
- 김지영. 2024. 「자연의 발전주의적 동원: 지리산국립공원 생산 과정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59권 제2호, 143~162쪽.
- 렘케, T. 2024. 『사물의 통치: 푸코와 신유물론들』. 김효진 옮김. 갈무리.
- 박배균. 2009.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공간과 사회》, 제31호, 49~87쪽.
- 박지훈. 2020. 「얼룩덜룩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정치경제학: 밥 제습과 나일링 섬의 초학파적 이론 기획」. 《경제와 사회》, 제126호, 476~525쪽.
- _____. 2022. 「인간 너머의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위하여」, 113~114쪽, 김준수·이강원·최명애·박지훈·황진태. 「인간 너머의 국가론에 대한 다학제적 논평」.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제1호, 109~116쪽.
- 사이토 코헤이. 2017. 「마르크스 에콜로지의 새로운 전개: 물질대사의 균열과 비데카르트

- 적 이원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4호, 92~112쪽.
- _____. 2019. 「소련 붕괴 후 마르크스의 에콜로지의 '재발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6권 제2호, 89~110쪽.
- _____. 2020. 「전 지구적 생태 위기의 시대에 마르크스의 물질대사 이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2호, 91~118쪽.
- 손정원. 2006. 「개발국가의 공간적 차원에 관한 연구: 1970년대 한국의 경험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5호, 41~79쪽.
- 이광근. 2022. 「21세기 초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의 쟁점들: 물질대사 균열 비판과 반비판」. 《경제와 사회》, 제133호, 358~399쪽.
- 이준형. 2023. 「미디어 정치 분석을 위한 제언: 정치의 미디어화에 대한 전략관계적 접근」. 《언론과 사회》, 제31권 제4호, 200~240쪽.
- 정구현. 2024.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20년 역사와 연구 동향」.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21권 제2호, 39~78쪽.
- 제습, B. 1996. 『폴란자스를 읽자』. 안숙영·오덕근 옮김. 백의.
- _____. 2024. 『국가론: 국가의 형성에서 미래의 추세까지』. 지주형 옮김. 여문책.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 _____. 2016.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307~330쪽.
- 최명애. 2021. 「재야생화: 인류세의 자연보전을 위한 실험」.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5권 제1호, 213~255쪽.
- _____. 2022. 「보다 '조심스러운' 인간 너머의 국가론을 위하여」, 112~113쪽, 김준수·이강원·최명애·박지훈·황진태. 「인간 너머의 국가론에 대한 다학제적 논평」.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제1호, 109~116쪽.
- 최병두. 2022. 「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30권 제4호 (통권 74호), 7~50쪽.
- 최영화. 2013. 「이명박 정부의 기업국가 프로젝트로서 한류정책: 전략관계적 접근법을 통한 구조와 전략 분석: 전략관계적 접근법을 통한 구조와 전략 분석」. 《경제와 사회》, 제97호, 252~285쪽.
- 황진태. 2016. 「동아시아 맥락에서 바라본 한국에서의 위험경관의 생산」.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2호, 283~303쪽.
- _____. 2019. 「박정희 정권기 국립영상에 재현된 '국가-자연': 소양강댐을 사례로」. 《지역사회학》, 제20권 제1호, 91~118쪽.

- _____. 2025a. 「한국의 국가-자연 연구 12년, 평가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60권 제1호, 117~141쪽.
- _____. 2025b. 「인간 너머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한 시론적 탐색」. 《개념과 소통》, 제35호, 71~117쪽.
- 황진태·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3호, 348~365쪽.
- _____.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1~27쪽.

- Baker, Susan, Bruford, Michael. W, MacBride-Stewart, Sara, Essam, Alice, Nicol, Poppy, and Bellamy, Angelia Sanderson. 2022. "COVID-19: Understanding novel pathogens in coupled socia-ecological systems." *Sustainability*, Vol.14, Issue 18, 11649.
- Castree, Noel and Braun, Bruce. ed. 2001. *Social Nature: Theory, Practice and Politics*. Blackwell.
- Choi, Young Rae. 2023. "The colonizers, the developmental state, and uneven geography of development: Reclamation of South Korea's tidal flats, 1900s-1980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82, pp. 23-37.
- Clark, Brett and York, Richard. 2005. "Dialectical materialism and nature: An alternative to economism and deep ecology." *Organization & Environment*, Vol.18, Issue 3, pp. 318-337.
- Doudaki, Vaia, and Carpentier, Nico. 2025. "Behind the narratives of climate change denial and rights of nature: Sustainability and the ideological struggle between anthropocentrism and ecocentrism in two radical Facebook groups in Sweden."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30, Issue 1, pp. 200-219.
- Environment Agency. 2007. *Review of 2007 Summer Flood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c9a55ed915d6969f460bd/geho1107bnmi-e-e.pdf>
- Gerber, Judith. 1997. "Beyond dualism: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nd the natural and social construction of human being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1, Issue 1, pp. 1-17.
-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

03/ar4_wg2_full_report.pdf.

- Jessop, Bob.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olity Press.
- _____. 2002.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Polity Press.
- _____. 2005. "Critical realism and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New Formations*, Vol.56, pp. 40-53.
- _____. 2007. *State Power*. Polity.
- _____. 2012. "Economic and ecological crises: Green new deals and no-growth economies." *Development*, Vol.55, pp. 17-24.
- _____. 2015. *The State: Past, Present, Future*. John Wiley & Sons.
- _____. 2016a. "Putting higher education in its place in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Comparative Education*, Vol.52, Issue 1, pp. 8-25.
- _____. 2016b. "The developmental state in an era of finance-dominated accumulation." In Chu, Yin-wah, ed.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 Reexaminations and New Departures*. Palgrave Macmillan, pp. 27-55.
- _____. 2017. "Nicos Poulantzas on political economy, political ecology, and democratic socialism."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24, No.1, pp. 186-199.
- Jessop, Bob and Sum, Ngai-Ling. 2006. *Beyond the Regulation Approach: Putting Capitalist Economies in Their Place*. Elga.
- Jessop, Bob and Morgan, Jamie. 2022.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realism and the state: from regulation theory to neoliberalism via Marx and Poulantzas: An interview with Bob Jessop." *Journal of Critical Realism*, Vol.21, Issue 1, pp. 83-118.
- Hwang, Jin-Tae. 2015.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7, Issue 9, pp. 1926-1943.
- _____. 2017. "Changing South Korean water policy after political and economic liberalis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47, Issue 2, pp. 225-246.
- _____. 2021. "Theorizing the more-than-human stat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73, Issue 4, pp. 641-649.
- Hwang, Jin-Tae, Lee, Sang-Hun and Müller-Mahn, Detlef. 2017. "Multi-scalar practices of the Korean state in global climate politics: The case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tipode*, Vol.49, Issue 3, pp. 657-676.
- Knudsen, Ståle. 2023. "Critical realism in political ecology: An argument against flat

- ontology.”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30, Issue 1, pp. 1–22.
- Meehan, Katharine, Shaw, Ian Graham Ronald and Marston, Sallie A. 2013. “Political geographies of the object.” *Political Geography*, Vol.33, pp.1–10.
- Narayanan, Yamini. 2025. “Animal–state relations: a critical multispecies geopolitics of anima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Park, Bae-Gyoon. 2008. “Uneven development, inter-scalar tensions, and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2, Issue 1, pp. 40–59.
- Quastel, Noah. 2016. “Ecological political economy: Towards a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l.28, Issue 3, pp. 336–353.
- Robbins, Paul. 2008. “The state in political ecology: A postcard to political geography from the field.” In Cox, Kevin, Low, Murray, and Robinson, Jennifer. eds. *The Sage Handbook of Political Geography*. Sage Publications, pp. 205–218.
- Searle, Adam and Turnbull, Jonathon. 2020. “Resurgent natures? More–than–human perspectives on COVID–19.”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Vol.10, Issue 2, pp. 291–295.
- Whitehead, Mark, Jones, Rhys and Jones, Martin. 2007. *The Nature of the State: Excavating the Political Ecologies of the Modern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York, Richard and Rosa, Eugene. 2003. “Key challenges to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Institutional efficacy, case study evidence, units of analysis, and the pace of eco–efficiency.” *Organization & Environment*, Vol.16, No.3, pp. 273–288.

The Political-Ecolog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

Hwang, Jin-Tae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ecolog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 While the theory has provided a powerful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odern capitalist states and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outh Korean social sciences, it has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revealing an epistemological limitation rooted in anthropocentrism. Starting from Bob Jessop's recent engagement with political ecology, this study examines subsequent efforts to conceptualize the state-nature relationship more concretely. It further explores the theoretical potential of the more-than-human state theory as an alternative to anthropocentric frameworks and discusses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this emerging perspective with key components of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and extend the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 from a political-ecological perspective, thereby contributing to critical analyses of state-nature relations.

Key words: strategic-relational state theory, political ecology, Bob Jessop, anthropocentrism, more-than-human approach